

한일, 폐광채움공법 개발 1998. 1. 15

한일시멘트는 폐광갱도를 경량기포콘크리트(ALC)로 채워 지반을 보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 폐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광채움용 콘크리트 시공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로써 폐광의 규모가 워낙 커 우회하기로 확정된 상리터널을 비롯 2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의 폐광은 물론 일반 고속도로 터널의 폐광과 강원도지역의 폐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 동해공장 크링카 출하자동화 시스템 구축 1998. 1. 30

쌍용정보통신은 쌍용양회의 동해공장에 시멘트 반제품 크링카의 출하자동화시스템을 구축,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장 정문에서 크링카를 시멘트 완제품과 함께 출하함으로써 출하절차와 출하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어 왔으나 시스템 구축으로 크링카 출하라인을 정문에서 분리, 전용도로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출하인력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고 출하동선이 간편해져 인건비와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강원정보기술, 고기능성 레미콘 배칭컨트롤시스템 SW개발 1998. 2. 9

강원정보기술이 고기능성 레미콘 배칭컨트롤시스템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배칭컨트롤시스템은 공장내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용량 기억장치를 통한 데이터 누적관리가 가

능하고 슬럼프관리 등 레미콘 관리의 핵심부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레미콘관리 소프트웨어(ICMS)는 품질, 영업, 출하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시스템에 비해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계열사인 삼표산업에 첫 설치중이며 동남아에 연간 2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으로 시장개척에 나섰다.

시멘트 업계, 수출 적극 나서 1998. 2. 24

시멘트 업계들이 계속된 판매부진으로 시멘트재고가 한계에 달하자 연안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목표를 지난해의 3배이상 늘려 잡고 판로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63만톤을 수출한 쌍용양회의 경우 (주)쌍용을 통해 최근 니카라과 3만톤, 스리랑카에 2만톤 수출을 확정하는 등 수출지역을 종전 동남아에서 미주, 남미, 서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80만톤을 수입했으나 올해는 수입은 동결한 채 수출을 70만톤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라시멘트는 총생산량의 10%(70만톤)를 파우어뉴기니를 비롯하여 동남아, 미주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쌍용, 저발열시멘트 양산 1998. 3. 3

쌍용양회는 최근 저발열 시멘트의 양산에 들어가 국내 최초로 포틀랜드시멘트 풀 생산라인체제를 갖추었다. 제품명이 「벨라이트 시멘트」인 이 제품은 물과 반응할 때 열발생이 적어 온도상승에 따른 균열을 방지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시멘트로 긴 교량의 하부구조물과 댐, 하천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지하저장소의 기초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중공업, 이집트서 대형 시멘트 공장 수주

1998. 3. 5

한국중공업이 이집트에서 1억6,000만달러 상당의 대형 시멘트공장을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주했다. 한중은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주처인 아랍시멘트사와 연산 140만톤 규모의 아랍시멘트공장 건설에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장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10km 떨어진 베니수에프지역에서 건설되는 것으로 한중은 키른, 원료밀 등 주요 설비를 제작, 공급함은 물론 공장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전공정을 턴키베이스로 수행, 오는 2000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페타이어, 시멘트소성 에너지로 재활용

1998. 3. 6

환경부는 지난 '95년 이후 63%선에 불과한 페타이어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 소성로 열원(熱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이나 유류 대신 페타이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189억원을 들여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등 5군데에 페타이어 소각로를 설치해 2002년부터는 연간 1,200만개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페타이어는 IMF이후 시멘트 제조에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이 환율상승으로 인해 톤당 45,000원 정도로 올라 부담이 커졌으며 페타이어를 전체 연료중 5%까지만 쓰면 시멘트 성분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초강력 콘크리트 개발

1998. 3. 23

프랑스 최대 토목·건설업체인 부이그사가 시멘트, 미세한 분말형 유리사, 석영과 규토의 증기 배합물에 길이 13mm, 직경 2백mm의 금속마이크로 파이버가 첨가된 일명 「활성 분말 콘크리트」라고 불리는 철근없는 초강력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기존의 철근콘크리트보다 무게는 절반이지만 강도는 20배이며 특수용기 등의 분야와 일반건축물 자재로 사용할 경우 내력벽이나 기둥의 수와 부피를 줄여 실내 가용공간을 넓힐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라, 말레이시아 합작 시멘트공장 준공

1998. 3. 31

한라그룹은 말레이시아 네게리셀렐란주 개발공사와 합작으로 건설한 연산 12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 준공식을 현지에서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한라시멘트와 네게리셀렐란주 개발공사가 자본금 7,200만달러를 각각 30%, 7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이 공장은 한라건설이 합작회사인 네게리셀렐란 시멘트로부터 2억4,000만달러에 턴키베이스로 수주, 지난 '95년 9월 착공후 2년 6개월만에 완공했다. 한라는 말레이시아가 이 공장의 완공으로 만성적인 시멘트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인접국가로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건설투자 30%격감, KDI 전망

1998. 4. 4

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지난해 보다 30%가량 크게 축소되고, 130만명(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수는 건설과 도소매업종에서 더욱 극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성장율은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1% 내외까

지 하락하고 특히 건설투자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융경색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등 주변 여건의 악화로 -30%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도 2~3%수준의 성장율과 6~7천 달러 정도의 국민 소득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시대 개막

1998. 4. 6

철근콘크리트 건축에도 1천kg/cm²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어진다. 일본 다이세(大成) 건설은 1cm²당 압축강도 1천kg(FC1000)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43층 초고층 집합주택에 본격 적용키로 했다. 다이세 건설은 강성이 높은 RC조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함에 따라 바람에 의한 흔들림이 적고 주택내부에 기둥이 없는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구조체공사비도 SRC조나 충전콘크리트 강관구조(CFT)에 비해 10~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도 13곳 콘크리트 포장

1998. 4. 6

건설교통부는 국도건설사업을 지금까지의 아스팔트 일변도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일부 전환키 위해 삼척~근덕간, 경북 강동~포항간 국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등 13건을 콘크리트 포장 대상사업으로 잠정 결정, 5개 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올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신규사업중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선과 도로파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가운데 토질이나 기후여건이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하면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비업무용토지 범위 축소

1998. 4. 6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시행령 등을 고쳐 7월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이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이 취득 후 1년내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토지를 팔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매입 및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용으로 간주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은 매입후 1년이 지난 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했으나 2년내에 사용하면 증과세 당하지 않게 되고 부동산임대업용토지는 토지가액의 1% 이상이면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한일, 국제금융공사(IFC) 자금 도입

1998. 4. 13

한일시멘트가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3,000만~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도입한다. 사모방식으로 발행될 이 CB의 만기는 7년, 표면금리는 5%선으로 확정됐으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없다. IFC는 지난 3월 한일시멘트를 방문, 재무상태와 경영현황 등을 점검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달리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않고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융자조건이 유리한 편이다. 투자방식은 대출, 전환사채(CB) 인수, 직접출자 등 3가지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일베일런스,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하반기 양산

1998. 4. 21

지난해 7월 한일시멘트가 미국 베일런스사와 합작

으로 설립한 한일베일런스가 올 하반기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하기 위해 용인에 300만셀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 7월부터 본격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2차 전지로 불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는 기존의 2차전지를 한 단계 발전시킨 첨단전지이다.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인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휴대전화기나 노트북 PC에 일제 2차 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충호 사장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가 본격생산되면 국내 2차 전지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연간 1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양, 목표관리제 도입

1998. 4. 27

동양시멘트가 최근 생산직을 제외한 간부, 사무, 기술직 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부문별, 팀별, 개인별 목표를 자율과 함의로 정한 뒤 그 목표달성여부를 업적평가의 자료로 활용해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목표관리(MBO) 제를 도입했다. 이로서 종전 주관적이고 감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인사평가방식을 개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업적을 평가해 승진, 승급, 성과, 상여 등 보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라, 스페인에 크링카 43만톤 수출

1998. 4. 27

한라시멘트는 스페인 유니온시멘트사와 시멘트 크링카 42만5천톤(714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99년말까지 강원도 옥계항에서 수출할 계획이며 스페인회사에 크링카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업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크게 부족, 국토개발연구원 발표

1998. 5. 6

앞으로 5년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요액은 13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최고 78조원에 불과, 전체 투자규모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교통부 종합투자계획상 오는 2002년까지 SOC분야 투자에 132조5,355억원이 필요하지만 조세수입을 고려한 실제 조달재원은 69조~78조원밖에 되지않아 56조~64조원 규모의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OC 투자를 줄일 경우 실업과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당초 투자계획의 70%인 93조원은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투자규모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공장 신증설 자유화

1998. 5. 12

건설교통부가 확정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앞으로는 공장구분을 없애고 주거지역내의 5백㎡ 이하의 공장에 한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도로나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분류, 면적 2백㎡ 이상의 공해공장을 지으려면 도로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했다. 이로서 소규모 일반공장들이 단순한 공장설비 증설로 갑자기 공해공장으로 분류돼 이격거리 규정 적용을 받아서 불법공장으로 제재를 받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게 됐다.

사우디 시멘트공장 준공

1998. 5. 13

한라그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SPCC사로부터 일괄 수주해 건설한 연산 135만톤 규모의 비샤 시멘트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지에서 열린 이 시멘트 공장 준공식에는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등 양측관계자 5백명이 참석했다. 지난 '94년 한라건설이 2억3천만달러에 일괄 수주한 비샤 시멘트공장은 당초 연산 120만톤 규모로 설계됐으나 한라건설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대 135만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건설했다. 생산되는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시장 뿐만아니라 인근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수출된다.

제조업 17년만에 '밀진 장사'

1998. 5. 21

작년 국내 제조업체들은 1천원어치의 물건을 팔아 3원을 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들은 매출액 1천원중 무려 64원을 각종 이자로 물었으며 31원은 환차손으로 날려보냈다. 이에따라 차입금의존도는 50%를 넘어섰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3,1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97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났는데 환차손은 무려 12조7,940억원이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도 6.4%, 부채비율은 일본, 미국에 비해 각각 2배, 6배에 달하는 396.3%로 높아졌다. 매출액은 11%로 96년의 10.3%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때 국내 제조업체들은 꾸준한 외형성장을 이뤘으나 환율폭등과 금융비용부담증가로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는 헛장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기 성장을 마이너스 3.8%

1998. 5. 25

설비투자자과 민간소비 등 경제 각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1/4분기중 우리 경제가 18년만에 처

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 잠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GDP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3.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4분기의 성장률 3.9%보다 7.7%나 떨어진 것이다. GDP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80년 4/4분기의 마이너스 7.8% 이후 처음이며 1/4분기 성장률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40개 사업 외자유치

1998. 5. 30

정부 총사업 34조6,400억원이 예상되는 민자유치 대상 40개사업의 시설 운영권을 외국인에게 팔아 외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6,800억원을 투자해 2003년까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외국자본을 도입, 추진하고 2005년까지 3조2,400억원으로, 61.5km구간에 건설되는 신공항철도 등 아직 착공하지 않은 35개사업에도 허용하여 SOC소유권을 일정기간 인정해 주고 예상수입액의 90% 이상을 보장할 방침이다.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1998. 6. 2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99년 말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고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비관세 물류축진 지역 지정, 광양항에 대한 사용료 면제조치, 예선사용료 및 도선료 80% 감면 등의 각종 광양항 활성화 정책에 이은 것으로 선사들의 광양항 기항을 유도하는데 다소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실가스협약’ 연내서명
1998. 6. 3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각국이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하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에 연내 서명하기로 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은 현재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처럼 감축분을 약속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고도 의정서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앞으로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량을 정밀히 산출해 가입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을 각국에 약속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실적 크게 감소
1998. 6. 9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모두 11만 3,74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2,087가구에 비해 30%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분이 4만 1,532가구로 작년 동기대비 29%, 민간부분은 7만 1,939가구로 30.5%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월별로도 감소세가 지속돼 주택수급의 불균형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한데다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업체들이 주택건설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불경기속 철근값 폭등
1998. 6. 9

IMF한파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도 철근값은 천정부지이다. 이같은 현상은 철근값이 3차례에

걸쳐 33%나 치솟은데다 업계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내수물량을 크게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선 수출에 전력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공사가 줄어든데다 국제고철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철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것은 황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상 지난 4월 건설시장에 유입된 철근은 전년동기대비 20.1% 감소했고 국제고철가격도 IMF이전 톤당 155달러에서 5월말 현재 120달러로 20%가량 하락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기 띠 듯
1998. 6. 10

내년 예산이 긴축편성되지만 기간국도건설 등 SOC투자는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도약 발판구축을 위해 SOC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하고 내년도 SOC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28.8% 많은 12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내년에 일 반국도 건설에 1조5,000억원, 기간국도(4, 5, 6차) 건설 1조2,192억원, 고속도로건설 지원 1조7,155억원, 경부고속철도 지원 7,189억원, 인천신공항건설 8,649억원, 7대 신항만건설 4,432억원, 광역도로·광역철도 건설 2,606억원 등 모두 8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현재 진행중인 SOC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분양권전매 8월부터 허용
1998. 6. 12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많아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계획후 명의변경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분양권의 제3차 매매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첨자가 2회 이상의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행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실업률 7.4%
1998. 6. 12

내년 상반기중 실업자수는 161만7,000명, 실업률은 7.4%로 사상최악의 실업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이런 전망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실업자수는 146만명, 실업률은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폐업 및 해고 등 사용근로자의 실직이 더욱 늘어나 내년 상반기중 정점에 달한 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실업자 151만 9,000명, 실업률 6.9%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GDP성장을 대폭 낮춰
1998. 6. 16

정부는 구조조정, 수출차질, 금융경색 등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4%로 대폭 낮추고 재정적자도 GDP대비 2%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국내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세수가 목표대비 10%안팎으로 감소, 거시경제지표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연간 6%로 예측한 실업률이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해고와 중소기업 도산사태

가 우려돼 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엔화약세로 수출차질이 우려되지만 수입감소로 무역흑자기조가 6월에도 계속돼 당초 210억~230억달러로 예상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9년 이후 건설업 경영 크게 호전
1998. 6. 1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IMF시대의 건설업 환경변화 전망과 대응과제'세미나에서 남충희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수주액은 올해 전년대비 1/3수준이상 감소하나 '99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2002년에는 '97년(불변가격)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99년 이후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대형 건설업체는 증가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등 건설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광역철도망 확충포류
1998. 6. 20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부담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5개 광역철도 사업중 중앙선, 경원선 등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정부가 전체 사업비중 설계비, 용지비 및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도 올해 배정했던 광역철도건설 예산 5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로 상당수 자치단체장이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다.